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시: 2026. 7. 20.(월) 16:00

장소: 606호 회의실

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

1. 일　시: 2026. 7. 20.(월) 16:00

2. 장　소: 606호 회의실

3. 참석자

ㅇ 조병구 위원장, 이재욱 위원, 이국현 위원, 이종기 위원, 강지웅 위원, 양석용 위원, 김보현 위원, 나기웅 위원, 이진서 위원, 이하정 간사

ㅇ 서은희 심의관, 이필복 심의관, 강정현 심의관

4. 회의록: 붙임과 같음

2026. 7. 20.

위원장　　조　병　구

간　사　　이　하　정

본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한 후 출석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연번	주 제	과제 담당관	소속	심의내용	승인여부
1	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법원인사관리 개선 방안 연구	서은희	행정 관리실	연구자 선정	적정성 평가
2	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	이필복	사법 지원실	과제 신청	승인
3	사법부『모바일 공무원증』 도입을 위한 연구	강정현	기획 조정실	결과 보고 (공개)	승인

▣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법원인사관리 개선 방안 연구

○ [심의 내용]: 연구자 선정

- 제안자가 출석하여 발표하고,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함
- 제안서 제출자: 시소전략연구소 주식회사 [책임연구원: 최재홍 이사]

○ [심의 결과]: 적정성 평가

- 연구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

▣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

○ [심의 내용]: 과제 선정

-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. 3. 12. 공포되어, 상고심 심리방식과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재설계 필요: 현재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하여 실질심리 사건을 선별하고 있는데, 대법관 증원에 대응한 적절한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 및 구체적 심리 방식에 대한 모색 필요
- 각국의 상고심 심리방식에 따른 재판부의 구성 사례 연구 필요: 각국의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은 나름대로 최적의 상고심 심리를 위해 모색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,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이루어질 대법관 증원에 대응한 적절한 상고심(대법원)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

○ [심의 결과]: 승인

- 과제담당관의 과제 신청을 승인함

▣ 사법부 '모바일 공무원증' 도입을 위한 연구

○ [심의 내용]: 결과 보고(공개)

- 사법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 운영체계(이원화 운영, 분실·위변조 리스크, 원격근무 인증 미비 등)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, 행정안전부·국회·헌법재판소의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·운영 사례를 비교·분석하여 사법부 맞춤형 TO-BE 모델 및 단계적 도입 전략을 도출함
- 사법부 특수성(재판정보 보안, 법정·접견실 등 특화 출입통제, 다양한 신분 구성원)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방식(행정안전부 공통 플랫폼 기반 + 사법부 전용 확장 모듈)을 권고하고, 「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」 개정안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함
- 사법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, 사례 분석, TO-BE 모델 설계, 단계별 도입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 가능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였음. 특히 법원공무원증 관련 내규 개정안, 구축·운영 비용 산정, 4단계 로드맵 등 향후 사법부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·기술적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됨

○ [심의 결과]: 승인

- 과제담당관의 결과보고를 승인함

(끝)